

광주 북구의회 검직률 5개 구의회 중 ‘최고’…출석률 ‘최저’

공개확대 ‘내고장 알리미’ 분석

최근 1년 동안 광주 5개 기초의회 중 검직률이 가장 높았던 북구의회가 출석률은 제일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직률이 가장 낮은 동구의회는 동기간 출석률 100%를 기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검직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해진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서 지

2023년 7월~2024년 6월 65%·83%

동구의회는 28.6%·100% ‘상반’

“지방정치 위한 의원임을 기억해야”

방의회 의정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했다.

기존 공개 대상은 ▲지방의회 회의일수 ▲회의 참석률 ▲의원 당 의원 발의건수 등 8개였는데, 의원 검직·국제교류 현황 등 의회 운영·사무와 의원 활동 분야에서 총 19개 항목이

추가됐다. 각 항목의 조사 시점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행안부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파악한 광주 5개 기초의회 의원의 검직률은 차이가 꽤 컸다.

검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북구의회로 전체 의원 20명 중 13명이 해당해 65%로 집계됐다.

그 뒤는 ▲광산구의회 61.1%(18명 중 11명) ▲서구의회 46.2%(13명 중 6명) ▲남구의회 36.4%(11명 중 4명) ▲동구의회 28.6%(7명 중 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본회의 참석률(출석률)은 동구의회 100%, 남구의회 99.1%, 광산구의회 98.8%,

서구의회 97.6%, 북구의회 83% 순으로 조사됐다.

두 수치를 비교할 때 검직률이 높을수록 출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90% 후반을 기록한 다 기초의회와 달리 본회의 참석률이 홀로 80% 초반에 머무른 북구의회의 출석률은 전국 ‘광역시 자치구’ 단위에서도 최저로 파악됐다.

이에 조례 발의 실적이나 민원 해결 건수 등 ‘성과’를 논하기 전에 북구의회의 성실도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은 “검직이 의정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당연지사”라며 “돈을 벌기 위한 사업가가 아니라 지방 정치를 위해 나온 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사무처장은 “생계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업을 유지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 돼서 새롭게 검직을 하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직무상 이해 관계에 있을 경우 검직이 제한되긴 하나 이를 감시하는 수단이 부족한 나머지 위반·비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재영 기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 검사, 재심 공판 출석 의사

檢 “데리고 오겠다” 소환장 요청

재판부, 내달 19일 공판 재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의 핵심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법정에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알렸다.

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75)씨와 딸(41)의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검사 B씨와 최근 연락이 닿았으며 증인 신청 유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공판 당일 실시간으로 소재를 조회해 직접 데리고 오겠다”며 재판부에 B씨의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이 사건 발생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A씨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B씨는 유선전화로 검찰

청에 직접 연락해 ‘8월 이후 증인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소재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B씨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공판 진행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차기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8일 오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안재영 기자



심폐소생술 배우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들

1일 광주 서구청 지하2층 민방위실전문훈련센터에서 열린 ‘반박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선미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강사로 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신임 광주고검장 송강 임명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광주고검장에는 송강(51·27기·사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충북 보은 출신인 송 신임 광주고검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무부 법무과 검사, 대구지검·수원지검 2차장 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안재영 기자

‘갑질 논란’ 남구 간부공무원 구청 복귀…노조 ‘반발’

“인사 철회” 촉구…구청장실 앞서 농성

김병내 청장 “업무 적합성 고려한 결과”

갑질 논란에 일선 동으로 전보됐던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7개월 만에 구청으로 복귀하자 노조가 “파주시식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보 인사에서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간부 공무원 A씨가 구청으로 복귀했다”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무한한 관용과 비호를 일삼는 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보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노조는 이날부터 구청장실 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여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으로 인사 조치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해당 직원은 이미 징계 조치를 받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완료됐다”며 “업무 적합성을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고, 노조의 주장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학동 참사’ 대법원 선고 내달 14일로 미뤄져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다원이앤씨 관계자들, 백출건설 대표 등 7명과 현산 법인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3일에서 다음 달 14일로 변경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연

기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변론 기일을 잡진 않았다.

이에 사고 발생 4년2개월 만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동4구역 철거 공사의 입찰 가액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산 간부와 법인 등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안재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